

# 서울교육청, AI평가·기초학력 강화… ‘학생성장’ 중심 대전환

정근식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고도화  
학습진단성장센터 생활권 전환  
예술교육 예산 2배 ‘1학생1예술’  
상담교사 증원·교사연구비 확충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전담 센터를 확충하는 등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학생 예술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 ‘1학생 1예술교육’ 실현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사연구 지원 예산 역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해 온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성과와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학습진단성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북권과 종부권을 아우르는 ‘제2서울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AI 기반 교육 정책 역시 본격화된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대상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SEN스쿨’을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 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설립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 등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AI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라며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는 1교 1명 배치를 목표로 현재 800명에서 1300명까지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방식도 변화한다. 정 교육감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성장 중심 평가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평가 부담은 줄이고, 학생에게는 보다 정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면으로 확대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전 학교 배치를 목표로 하고, 마음건강학교도 2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 지원과 행정 부담 경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며 “교원 연구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약 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원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과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성고충심의 위원회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인다. SenGPT 기반 AI 행정 지원 프로그램도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문화 향유 역량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1학생 1예술’ 교육을 지속 강화한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용역 4193억 발주

3기 신도시 기반시설 중심  
지역경제·일자리 효과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 원), 용역 252건(1773억 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 원)를 비롯해, 안산상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 원)와 남양주 왕숙 시도 20호선 확장공사(225억 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용역 부문 또한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 대행 등(335억 원) ▲남양주 왕숙 부지 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 원) ▲과천과천 부지 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 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돋구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교학점제 ‘부담 줄이고 선택 늘린다’

교육부, 선택과목 학점기준 완화  
미이수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 기회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등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돋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학점 이수 기준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에 대해 출석률 중심 이수 기준 설정,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체계 확립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 일수 2/3 이상 출석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 신청 후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이수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 서부트럭터미널, 990세대 복합단지 조성

서울, 건축위원회서 3건 심의 통과  
금호역세권 장기전세 167세대  
목동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

서부트럭터미널이 990세대 25층 랜드 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세대가, 중랑 목동엔 공공 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 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북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 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서남권 물류거점 고도화,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이 이뤄지며 지역별 도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일대)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높이 77.4m 규모로 조성돼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공동주택 990세대(임대주택 98세대 포함)와 업무시설 1만 6000만 m<sup>2</sup>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경질설 일축에도 美 국토장관 사퇴 압박 거세져  
▲트럼프 “미네소타 시민 사살, 정직하게 수사”…  
연일 진화 메시지

/사진 뉴시스

▲英 총리, 8년만에 방중… 중국발 안보 우려에 “냉철·현실적 시각 유지”  
▲스페인 정부, 불법 체류자 최대 100만 명 체류 합법화

▲“프랑스, 공공 부문서 줌 등 美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 금지”  
▲우크라 외무 “젤렌스키, 푸틴 직접 만나 영토·원전 문제 논의할 준비돼”